

권고사직 해놓고 자발적 퇴사라니... 회사 거짓신고에 노동자 두번 운다

직장 잃고 실업급여도 못받아 이직확인서 회사만 제출 문제 5년간 이의신청 2만6649건 과태료 부과는 1355건 5% 뿐

#. A씨는 광주에서 올해 초 '주간근무'만 하기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다. 사측은 이후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야간근로로 변경하려 했다. A씨는 거부했고 회사는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 활동을 준비하려고 고용지원센터를 찾았다가 사측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만 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사측에게 '사측의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해고', 즉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사측은 거부해 광주시 노동센터에 상담을 의뢰했다.

#. B씨는 회사의 직제 개편으로 부서가 폐지되면서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고 사직서를 썼다. B씨는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다 사측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사측에게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적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회사측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어 '권고사직'으로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코로나19장기화로 채용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광주·전남지역 일부 기업들이 노동자를 권고사

직 형태로 해고하고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자발적 퇴사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졸지에 직장을 잃고도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한 현실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노동계에서는 실질적인 노동 여건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회사측만 제출토록 하고 있는 이직확인서 외에 노동자들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 판단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광주·전남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5만4987명(광주 2만 7604명·전남 2만7383명, 2018년)→6만533명(광주 3만166명·전남 3만367명, 2019년)→6만9204명(광주 3만5049명·전남 3만4155명, 2020년) 등으로 매년 10%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4만4670명(광주 2만57명·전남 2만4613명)이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를 받았다며 신청을 한 상태다. 특히 해고·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지만 회사가 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거짓 보고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된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현행 제도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제출하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포함된 이직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형편이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에게만 작성 권한이 부여돼 있어 사업주가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노동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회사가 정부지원금 등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겠다고 하거나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테니 무급으로 출근하라고 하는 등 노동자를 회유하기도 한다는 게 노동계 설명이다.

또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미발급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노동전문가들이 모인 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 한 건수는 2만 6649건에 달하지만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5%(1355건)에 불과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올 들어 거짓 작성한 사업주 11곳이 전부였다.

노동자가 직접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확인청구), 고용보험심사관(심사청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재심사청구)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인정받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노동계에서는 이같은 점을 들어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사측 뿐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부여하고 노동자의 괴롭힘 입증책임 등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광권 민주노총광주본부 선전국장은 "사측에만 권한이 있으니 실업급여제도를 마치 자신들이 베푸는 시혜처럼 생각하고 이를 악용하기도 한다"면서 "노사 양측에 작성 권한을 부여하고 양쪽의 이직 사유가 일치하지 않으면 입증책임을 사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자전거 무료로 고쳐드려요 6일 광주 북구청 광장 자전거 이동수리센터에서 건설과 도로관리팀 관계자들이 주민들의 자전거를 무료로 고쳐주고 있다. 북구는 화~목요일까지 주민들과 자전거 동호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각동을 순회하며 요일별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경찰 '학폭 사망' 고교서 학폭 예방 캠페인 "상반기도 했는데..." 실질적 예방대책 절실

경찰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교생 <광주일보 7월 5일 6면>이 재학했던 고교를 찾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선도활동을 벌였다.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이 올 들어 단 한 차례만 방문,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뒤라 캠페인 위주의 행사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안경찰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A

고 앞에서 지구대 경찰관 4명과 학교전담경찰관(SPO) 7명, 해당 학교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등굣길 캠페인과 순찰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교 개학에 맞춰 학교측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교내외 주기적인 지역안전순찰을 실시하는 등 학교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순찰과 홍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A고 앞에서 이뤄진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의 경우 올 상반기 때와 다르지 않은 행사였다는 점에서 실효성 없는 이벤트성 행사를 답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고의 경우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진데, 캠페인을 통한 적극적으로 신고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점에서 고민하지 않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광안경찰 관계자는 "A고 요청으로 2학기 개학일에 맞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면서 "캠페인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항공권 위조 판매' 베트남 유학생 적발

"3만원이면 체류 연장할 수 있는 항공권 만들어요." 가짜 출국 항공권을 만들어 판매한 베트남 유학생이 붙잡혔다. 코로나19로 국제선 항공편이 끊긴 것을 악용, 항공권을 위조해 체류기간을 늘리는데 사용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10일 전자항공권

을 위변조해 판매한 혐의(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로 베트남 유학생 N(여·27)씨를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N씨는 지난 3월부터 국내 단기 체류 베트남인 15명을 상대로 위조된 출국항공권을 2만~3만원에 판매,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앞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N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체

류 기간 연장을 항공권 판매'라는 광고를 게재한 뒤 신청한 베트남인들의 인적 사항을 받아 전자항공권 문서를 위조했다.

N씨는 베트남인의 성명 및 항공기 편명, 출발일시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변조한 항공권을 만들어 판매했다.일반인은 외관상 진위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정교해 이를 구매한 15명중 10여명이 체류기간을 연장해 머무를 수 있었다는 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측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경찰, 영장심의위까지 거쳐 4번째 영장 신청했지만 법원서 기각...검·경 신경전 지속될 듯

경찰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사에게 기각당하자 영장심의위원회까지 요청해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낸 주시 사기사건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네 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경찰 입장과 달리, 법원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준 셈이 되면서 검·경 간 신경전 분위기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에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8명을 검거한 전남청사이비수사대 사건과 관련, 경찰이 신청한 3차례의 구속영장(사후영장 1차례, 사전영장 2차례)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이 최초 28명 중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들어 기각했다. 경찰이 관련 내용을 보강해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경찰은 A씨 한 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재차 신청했고 이번에도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영장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은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각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영장 청구 적정'이라는 의견을 내놓자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추가로 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영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가짜 주식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8명을 검거한 전남청사이비수사대 사건과 관련, 경찰이 신청한 3차례의 구속영장(사후영장 1차례, 사전영장 2차례)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이 최초 28명 중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들어 기각했다. 경찰이 관련 내용을 보강해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경찰은 A씨 한 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재차 신청했고 이번에도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영장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은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각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영장 청구 적정'이라는 의견을 내놓자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추가로 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덕남동, 임야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 임야 661㎡, 지분매매
- ▶ 매매 - 6000만원

오피스텔 신축부지

- ▶ 신안동, 대지 582㎡(구 176평), 상업지역
- ▶ 지하1 지상10층, 15평, 72개 허가득
- ▶ 법인 양도·양수 가능
- ▶ 분양/임대 100%될 장소
-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